수완지구 '랜드마크 교량' 준공 광주지역 최대 아파트 단지인 수완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교량이 13일 준공됐다. 수완지구 관문에 자리 잡은 성덕교〈왼쪽〉는 길이 72m, 너비 35m로 상판에는 높이 38m의 아름다운 반원형 아치가 설치됐다. 사장교 형태인 성장교는 길이 107m, 너비 12m로 32m 높이의 주탑이 눈에 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불합리한 法' 어민 범법자 만든다

안강망 8t·자망은 10t 미만 규정
대형 어선과 경쟁위해 어선 개조

현행 수산업법 등이 어촌 현실과 동떨어져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민들에 따르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어선과 어구 어법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먼바다까지 출어하는 어민들은 법망을 피해 어선 등을 개조하고 있으며,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민어 등을 어획하는 연안 안강망(鮟鱇網)의 경우 8t 미만으로 톤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배 크기가 너무 작아 무거운 닻을 끌어올릴 때 전복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12일 목포해경에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안강망 선주 김모(44)씨 등 10명은 출어에 앞서 조선소에서 고물(船尾)에 합성수지(FRP) 판을 덧붙여 무게와 길이를 늘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소형안강망협회' 김희택 회장은 "8t 미만 어선은 그물(길이 80m)과 그물을 고정하는 닻(무게 750~800kg)을 올리면 배가 심하게 요동쳐 뒤집힐 우려가 크다"며 "현실을 무시한 법 때문에 어민들이 200여만원의 벌금과 최고 두 달간 조업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새우류를 잡는 10t 미만 연안 자망(刺網) 어선(9.77t 기준 길이 13m 내외) 선주들도 같은 이유로 배 중량과 길이를 늘이고 있다.

젓새우잡이 7.93t급 '전성호' 선주 박기환(53·신안군 임자도)씨는 "뻘에 박힌 닻을 끌어올리는 하중이 2t이 넘고, 물속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물 무게도 1t 가량 되는데 10t 미만의 소형 선박으론 위험하다"며 "불법 개조에 따른 사고 우려도 커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의 무게를 규정하고 있다"며 "연안 안강망과 자망 규정을 완화하면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 안강망·자망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연안 안강망 78척, 연안 자망 3천585척이 허가를 받아 조업 중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안강망(鮟鱇網)=조류가 빠른 곳에 닻으로 고정된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펼쳐 서남해안 일대에서 참조기·민어 등을 가둬서 잡는 어법.

▲자망(刺網)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넓게 펼쳐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게 해서 잡는 어법. 멸치·고등어·방어 등이 주 어획 대상이다.

年 800% 살인 이자 대부업자 2명 검거

광주 서부경찰

연 최고 8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13일 유흥업소 여직원 등 10여 명에게 5천300만원을 빌려주고 연 800%의 높은 이자를 받은 이모(28)씨 등 2명을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 M빌라에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노래방 도우미 김모(여·27)씨 등 10여 명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50만원을 떼는 등의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사채장부 및 차용금계약서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대부업체 광주에 556곳 구청 단속 '사실상 방치'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6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자율에는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사례금 ▲할인료 ▲수수료 ▲연체이자 ▲선이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올 8월 말 현재 556곳. 각 구청은 지난해 4월 감독권을 광주시로부터 이관받아 단속에 나섰으나 ▲이자율 상한선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등은 적발하지 못했다.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 58건에 대해서만 시정지시를 내림으로써 악덕 대부업자들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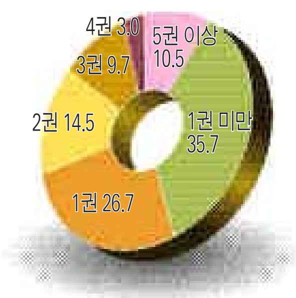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어려운 서민의 경제사정을 감안,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네티즌 3명 중 1명 한달 책 1권도 안 읽는다

'사랑방잡' 401명 조사

■한 달 평균 독서량 (단위:%)



■즐겨 읽는 분야 (단위:%)

광주의 네티즌 3명 중 1명은 한 달 평균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광주·전남 취업 포털사이트 '사랑방잡'(http://job.sarang-bang.com)이 광주지역 네티즌 40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7%(143명)가 한 달에 1권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1권을 읽는다고 답한 네티즌은 전체의 26.7%(107명)에 불과 하는 등 절반 이상(62.7%)의 독서량이 월 1권 이하였다.

반면 한 달에 5권 이상을 읽는다고 답한 네티즌도 10.5%(42명)를 차지해 의외의 결과를 냈다. 이 밖에 2권 읽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4.5%(58명), 3권은 9.7%(39명) 등이었다.

즐겨 읽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7.2%(149명)이 소설이나 시집 등 '문학류'라고 답했으며, '재테크 서적'(20.4%·82명), '장르 관계없다'(17%·68명), '직무·취업 서적'(11.7%·47명), '에세이류'(9.5%·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 구입처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점'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1.1%(165명)로 가장 많았고, '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비율은 28.7%(115명)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짜 SKY 학원 강사' 19명 기소

검찰, 사문서 위조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3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가짜 졸업증명서를 직접 만들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학원장 겸 학원강사 김모(47)씨 등 학원강사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문대 졸업증명서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넣는 수법으로 직접 위·변조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업자에게 30만~200만원을 주고 가짜 졸업증명서를 산 혐의다.

연세대를 졸업한 남자친구를 둔 여성강사 A씨는 취업을 바라는 강남 대치동의 학원이 명문대 출신을 선호한다는 말을 듣고 남자친구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 스캐너로 이 졸업증명서를 그림 파일로 만든 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름·생년월일·학과·학번 등을 바꿔넣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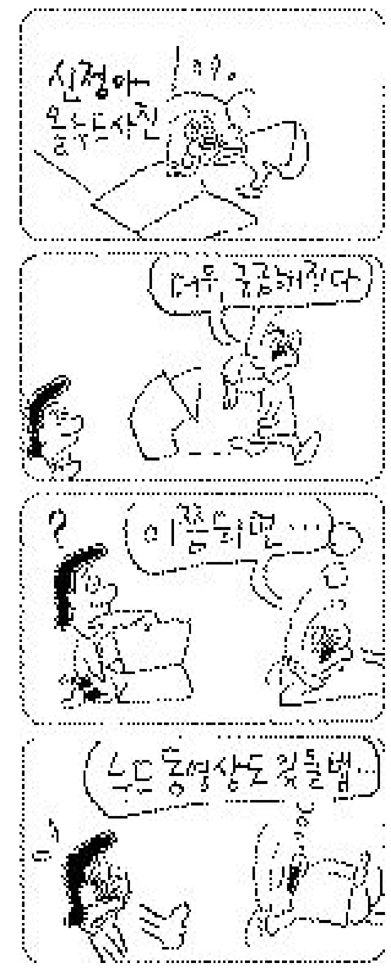
국어강사 E씨는 인터넷을 통해 그때그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이미지가 담긴 CD를 산 뒤, 졸업증명서 발급날짜만 바꿔 출력해 갖고 있던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위조 직인을 찍었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위조한 대학 졸업증명서와 토익성적표를 사들여 취업과 승진을 위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회사원 김모(31)씨 등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ec.or.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나우인참 〈7308〉 김종두



車 불법 수출 관련 영업사원 무죄

쌍나팔

○…불법 자동차를 사기 수출한 무역회사 직원들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던 자동차 영업사원이 1년여가 넘는 법정 투쟁 끝에 승소.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홍훈)는 사기혐의로 기소됐다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모(27·광주시 동구 동명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정씨는 지난해 7월 임시번호판을 단 할부차량 553대(92억원 상당)를 독일 등 13개국에 판매한 인천 A무역 측에 수출면장(輸出免狀) 발급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과 '임시번호판 운행허가 반납증'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것.

○…정씨는 당시 "할부 차량을 판매했을 뿐, 불법 매매조직인 줄은 몰랐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최권일기자 cki@